

ISSUE & FOCUS

‘세월호’ 이후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세월호’ 이후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어처구니가 없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부터 허술한 재난구조체계, ‘관피아’와 전관예우 관행, 대통령의 만기 친람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시스템 전반이 환골탈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발 빠르게 국가 개조라는 담론과 함께 다양한 개혁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러가라는 속담처럼, 서둘러 마련한 해법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기 쉽다. 특히 우리 여론은 쓸림이 두드러져, 냄비처럼 들끓다가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곤 했다. 미봉책이나 대증요법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근원적인 처방을 차분하게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규제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사회안전분야는 선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 규제수준을 강화할수록 순응 유인이 낮아지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사전)규제와 (사후)감독을 구분해서, 규제수준은 세계표준에 걸맞게 설정하되,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된 원전부품 비리도 어찌면 미국·캐나다 등 원전 전문가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증·규제가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일탈을 부추긴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관피아’의 문제점은 차제에 손 봐야 한다.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지방대학총장의 1/3 가까이를 차지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관료 출신 대학총장을 모두 부적격자로 매도하는 것도 지나치다. 코리안 리에서 다섯 차례 연임했던 박종원 전 사장처럼 민간에서 대성한 관료도 적지 않다. ‘관피아’의 친정 로비와 유착을 막는 것이 정공법이지, 퇴직 관료가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하책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자칫 모든 관료가 정년까지 대과(大過)없이 지내려 하면서 무사안일과 인사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

고위공직 문호를 더 개방해, 민간 전문가 영입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보수체제 등은 그대로 둔 채, 또 공직 퇴임 후 취업규제를 강화한다면 과연 유능한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올지 의문이다. 오히려 민간에서 퇴출되기 직전이거나 정치권 또는 부모 영향력에 기댄 한계 인력이 공직을 점령하지 않을까.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목회자의 경우처럼 직업 세습이 공직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은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 들어온 민간 전문가에게도 친정이 있게 마련인데, 그 유착관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숙고할 대목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특유의 순환보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의 최대 약점인 미흡한 주인의식과 창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1년 남짓 재임하는 국무위원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연임이 드문 대학 총·학장, 2년 임기도 못 채우는 검찰총장, 1년에 한번 꼴로 자리를 옮기는 부처 실·국·과장과 판·검사, 정권만 바뀌면 물러나는 공기업 임원 등 단명 공직자가 무슨 비전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조직을 이끌며, 부하를 통솔할 수 있을까. 전임자와 차별화하느라 정책 일관성도 없고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은 채 엄청난 학습비용을 치르고 시행착오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이 역량과 무관하게 돌아가며 잠시 그쳐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한 대충 대충 일하거나 줄을 서는 관행은 불식되기 어렵다. 철저한 검증은 거쳐 어렵게 뽑고, 전권을 위임하되 공과를 엄격히 평가해 잘하는 사람은 몇 번이라도 연임을 보장하는 신상필벌이 확립돼야 한다.